

초청 포럼 독일 통일 5년

정치·경제 통합의 경험과 교훈



사 회

서병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주제발표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정용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허 선 (재정경제원 과장)

김영찬 (한국은행 조사역)

〈무순〉



서병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사회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 주시고,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이와 같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 발전에 가장 두드러진 기여를 해 왔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 문제에 앞장서서 길을 개척하고 있는 현대 그룹의 두뇌인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 통일 문제에 관한 포럼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은 독일 통일에 관한 한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독일 통일 5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독일의 통일 과정과 그 이후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또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하는 입장에서 오늘 진지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광작 교수님이 옥고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많은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자세하게 서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논의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발표하신 논문의 기초라든지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용길 박사께서는 정치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그리고 허선 과장과 김영찬 조사역께서는 경제 및 금융 측면에서, 저도 역시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 교수님과 함께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발표 논문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박광작 교수께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작 이번에 수준 높은 월간 「통일경제」지에 발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독일 통일 5주년을 맞이해서 ‘정치·경제 통합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는 새로운 입장에서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썼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요청을 2~3년 전에 받았다면 또 다른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최근에 「슈피겔」지 1995년 9월 4일자에 10월 3일 독일 통일 5주년을 맞이해서 특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경제신문에도 경제·통화 통합에 관한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바르틴 교수가 쓴 것도 있는데, 제가 몇번 정독을 한 후에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까 하는 점과 관련하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 정치적인 문제 혹은 정치·사회적인 문제는 탁견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경제 중심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해서 우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1961년 8월에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었는데, 저는 그 때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지 아니했다면 동독은 마치 사람이 동맥이 끊어져서 출혈하듯이 동독의 모든 인적 자원이 서독으로 흘러 들어가서 동독은 와해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당시에 호네커가 베를린 장벽 축조 임무를 받고 강제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동독이 긴급 지혈이 되었다고 할까 강압적인 수단으로 지혈이 됐고, 아시는 바와 같이 1953년 6월 17일 동베를린에서 자유를 위한 큰 사변이 일어났는데, 소련군 탱크가 그것을 진압했기 때문에 결국 동·서독간에 있어서의 체제 경쟁은 1961년의 인위적인 장벽 구축으로서 표현되듯이 이미 체제 경쟁은 그 때 끝나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정치학자들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75년 헬싱키 유럽안보협력회의 및 1985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동독에 영향이 미쳐서 베를린 장벽이 철폐되면서 급진통일이 불가피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왜냐하면 단계적인 통일 방안이 제기된 바 있지만, 즉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1월 28일 서독 의회에서 환 총리가 10개항의 점진적 통일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황의 역동성과 정치적인 다이내믹이 급진 통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급진 통합 방식의 불가피성에 따라서 통화, 경제, 사회 동맹의 체결이 우선 급속이 추진되었는데, 만약 동독이 자립적인 국가 체제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코메콘 체제라는 동독의 주변의 모든 경제관계, 사회주의적인 분업관계의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동독 체제가 경쟁력 있는 체제로 되어야 하는데 단계적으로는 그런 방안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의 의견일 뿐 아니라 이번 「통일경제」 9월호에도 약간 소개되어 있지만 한스베르너 진(Hans-Werner Sinn) 교수의 저서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마르크화가 우리 동독인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진주해서 1945년
대기업, 대재벌,
대토지 소유자의
재산을
국유화했습니다. 통일
후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의를 할 수 없고
원상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독에는 사적 소유의
중소기업이
1972년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20년도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원소유자가
강압적으로 배상없이
재산이 강제로
수용되었던 것에 대해
원상 회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마르크화에게 가겠다”는 명제가 유효한 1961년의 상황, 즉 동독의 고급 인력이 서독으로 빠지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1990년에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동서독 경제 통합과 그 후의 적응, 안정화 과정의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인데 통합 원칙이 점진적인 통합이나 혹은 급진적인 통합이나의 기본적인 전략 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급진 통일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통합, 통일로 연결되었고, 통일 과정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좋은 경제 정책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관리청이 1994년말로 해체되었는데 신탁관리청이 수행한 역할은 동독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조직 원리인 국가 기업 체제 안에서 콤비나트의 해체, 기업 분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해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신탁청이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부동산 소유권 문제가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보완 대책을 발표해서 해결이 되어 가고 최근에는 구 동독 기업의 부채 정리,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들이 기업 분할의 한계 등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알고 지나가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동·서독의 소유권 문제와 자주 관련을 시키는데, 동독에 있어서의 사유재산 철폐 과정이 북한에 있어서의 철폐 과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진주해서 1945년 대기업, 대재벌, 대토지 소유자의 재산을 국유화했습니다. 통일 후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의를 할 수 없고 원상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독에는 사적 소유의 중소기업이 1972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중소기업이 1972년까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은 계획경제 체제 내에서 주문 생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20년도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원소유자가 강압적으로 배상없이 재산이 강제로 수용되었던 것에 대해 원상 회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련군이 들어와서 사유 재산을 철폐한 것은 예외로 하고 다른 소유권 문제는 당연히 원상 회복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동독 경제의 붕괴 정도가 엄청났습니다. 산업 생산 활동이 약 1/3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1920년대말의 공황기보다도 더 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활동 붕괴의 이유가 급진 통일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동구 체제의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만일 동독이 존립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남북한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현상으로서만 보지 말고 국유화 과정 자체를 분석해 보면 문제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통화·경제·사회 동맹 후에 동독에서 급격한 임금 상승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동독 경제를 붕괴시킨 요소 중의 하나는 1:1 통화 교환 비율 때문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그것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1로 교환하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저장(貯量)이 아닌 임금 부문의 유량(流量)에 대해서 1:1 교환을 했거든요. 유량은 임금 협상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1:1로 교환했다 하더라도 다음 노동 협상의 자율 원칙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5년 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협상 과정에서 동독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 쌍방으로서 경영 주체와 노동 대표가 존재해야 되는데 동독에서는 공적 기관인 신탁관리청이 협상을 했으니깐 공적 기관은 동독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일종의 동독 근로자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가 임금 상승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마음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독일이 임금 정책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동독 경제의 붕괴 정도가 엄청났습니다. 산업 생산 활동이 약 1/3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1920년대말의 공황기보다도 더 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활동 붕괴의 이유가 급진 통일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동구 체제의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만일 동독이 존립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독이 존립했다 하더라도 시장기반이 동구가 아니고 사유력을 비롯한 세계시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40년간 재투자라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원천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주택 부문이 상징적인데 완전히 폐허가 되고 공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형적인 상징이 로보트론(Robotron) 같은 전자회사인데 이 회사의 설

“1994년도 4/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동독 지역에서 9.0%, 1995년 1/4, 2/4분기에 7.0%, 6.9%의 성장을 기록해서 동독 지역이 구소련을 포함한 유럽 지역 내의 전환 국가 중에서 가장 활력 있는 성장 지역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는 고철로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전 통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었겠으나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동독 경제는 결국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독 경제는 어땠습니까? 서독 경제도 1970년대 이후 사회당 집권하에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그 후 1985년의 실업률이 8.9%나 되었고 통일후 서독 지역의 실업률이 1995년에 9% 정도 예상됩니다. 서독 경제 자체도 통일 때문에 부담이 온 점도 일부 있겠습니다. 마는 서독 경제가 1970년대부터 구조 조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전에도 구조 조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는 중세 조치, 재정 팽창, 동독에 대해서 금년까지 엄청난 규모의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 등이 서독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통일 후 동독의 GDP 성장률이 1993년 5.8%, 1993년 독일 전체가 -1.1% 성장했다가 1993년 말부터 점차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서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1994년도 4/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동독 지역에서 9.0%, 1995년 1/4, 2/4분기에 7.0%, 6.9%의 성장을 기록해서 동독 지역이 구소련을 포함한 유럽 지역 내의 전환 국가 중에서 가장 활력 있는 성장 지역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독에 비해서 동독 지역은 여러 부문에서 생활 수준, 삶의 질이 아직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금년 동독 경제의 GDP 성장률은 약 9% 정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약 2.5%로 유지되어 거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통일 초기인 1992년에는 4.6%까지 물가가 올라서 이 때에는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세계경제포럼의 1995년도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에서 독일을 스위스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사
특집

“최근에 동독 지역의
할레에 있는
할레경제연구소(IWH)
가 108개의 지표를
개발, 동·서독간의
삶의 상태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이
「슈피겔」지에 나오고
있는데, 그 결론은
동·서독간에 삶의
균등화가 5년만에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 독일 경제에 있어서 실업 문제가 지표상으로 1995년 약 15% 정도의 동독 지역의 실업을 예상하는데, 수적으로는 약 100만명 정도 됩니다. 통일 당시의 인구가 약 1,640만명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약 890만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고급 인력이 서독 지역으로 가서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동독 지역의 주민수를 약 1,550만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동독 지역에서의 맞벌이 주부 비율이 약 44%, 서독은 39%입니다. 그 차이가 약 5% 포인트라는 것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볼 때 제가 알기로는 같은 베를린 지역이니까 교사의 경우 월급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서독에서는 교사의 경우 부인이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데, 동독에서는 교사의 경우 부인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부녀자들이 전부 근로해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라는 서독의 낮은 맞벌이 비율을 고려하여 서독 기준에서 본다면 동독 지역의 15%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과대 평가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문제는 과국에서 새로 시작할 때 발생하는 큰 사회적 문제이므로 우리는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동서독 도시간의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동독의 드레스덴 지역은 실업률을 11.3%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독 지역에서 구조 조정 상에 문제가 있는 지역, 예를 들어 브레멘 같은 주도시(州都市)는 실업률이 12.5%입니다. 이와 같이 서독지역의 중요한 큰 도시들이 실업률이 더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뮌헨같은 곳은 15.6%나 됩니다. 일부 동독 지역의 번창하는 지역은 서독보다도 생산 시설이 더 초현대화 되어 있고 더 발전의 전망이 보인다고 평가됩니다. 최근에 동독 지역의 할레에 있는 할레경제연구소(IWH)가 108개의 지표를 개발, 동·서독간의 삶의 상태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이 「슈피겔」지에 나오고 있는데, 그 결론은 동·서독간에 삶의 균등화가 5년만에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느 수준까지 가면 동진하게 균등화되었다고 볼 것인가 하는 기준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1년에 DM 1,700억, 한화 기준으로 약 85조에 달하는 서독 주민들의 소득이 절감되는 통일 비용을 서독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63조 원임을 감안하면 그 엄청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가 조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북 지역의 주민들은 정서상으로 자기들은 아직 평등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1990년이래 약 DM 8,400억에 달하는 전문학적 규모로 서독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세금이 이전 지출을 통해서 동북 지역에 지출되었습니다. 5년으로 나누다보면 이것은 1년에 DM 1,700억, 한화 기준으로 약 85조에 달하는 서독 주민들의 소득이 절감되는 통일 비용을 서독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63조 원임을 감안하면 그 엄청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독일 통일 비용이 언제까지 들어가야 하고 어디까지가 삶의 균등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급진 통일 이외의 다른 통일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블린 교수 같은 분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급진 통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동북체제는 어차피 체제 전환과 구조의 현대화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소비 부분에서 서독의 원조만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안이 있었느냐? 물론 독일 통일의 융합 비용은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따라서는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주류는 그것을 그대로 역사적 역동성의 관점, 정치적인 관점뿐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대안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동북 지역에서는 재화 공급의 개선, 인프라 투자 확대, 현대적 생산 시설의 설치 등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최첨단 통신정보산업 부문에서 광섬유 케이블을 동북은 전부 깔았는데 서독은 옛날 설치된 케이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블린 상백 총재 이후에 나왔던 단계적 통일 방안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할 총리가 국회에서 발표할 때 모든 체제 개혁 조치와 연계했습니다. 동북에서의 체제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정치범 석방을 포함한 모든 정치의 다원적인 구조로 동북의 정치가 발전하지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민족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 할 일이지, 어떤 전략적, 전술적인 것에 머문다면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않으면 실질적으로 협력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료서비스 같은 인도주의적인 것은 원조해 주겠다. 그러나 국가연합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을 많이 깔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제조건을 천명함이 없이 국가연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을 상당히 심사숙고한 콜 총리의 10개 방안입니다. 그 당시 안보특보인 텔칙의 일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 점을 저는 주목해 두고자 합니다.

...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경우 점진적으로 통합한다는 것도 북한의 협력에 의존해야 됩니다. 협력은 뭔가 하면 북한 당국이 구체적으로 제도상으로 어떤 점을 협력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체제가 교조적, 사상적으로 주민 통제와 외부 세계와의 정보 단절을 기초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무너지는 때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이 민족의 상래와 어떤 체제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장래를 결정하는 자결권 속에 선택을 위한 객관적 판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 그러므로 통일 논의를 한다면 북한 위정자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런 자결권·판단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1972년 이후의 동서독간의 관계를 보면 그것이 하나의 공존의 논리이지 어떤 통일 논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논의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민족 자결권입니다. 자유·평등·보통선거를 통한 선택권을 독일 국민에게 주어야 된다, 말하자면 동독 주민에게도 주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 그러면 독일 통일 5주년의 성공적인 성과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 사회 통합을 가깝게 하는 복지적 시장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하나의 좋은 사회체제, 국가체제의 모형으로서 남한이 만들어지면 어느 단계에 계기가 되고 정보가 자유화되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되니까 남한의 모형이 통일국가의 모형이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민족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모형

“통독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동독은
GDP가 1994년에
9% 성장을 했는데,
유럽에서는 오직 동독
지역만 이런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 할 일이지, 어떤 전략적, 전술적인 것에 머문다면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경제가 독일 통일에 기관차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오늘 발표에서도 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해 주시면서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특히 논문에도 나오지만 독일은 1990년 7월 1일에 경제·사회통합을 먼저 함으로써 통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독일이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정치적 통일에는 불가피하게 전승국인 미·영·불·소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우선 경제적인 통일을 먼저 해 놓고 기정사실화함으로써 4대국이 불가피하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통합이 정치 통합을 이끈 하나의 실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독이 통일후 5년이 지나면서 급속히 개발됨으로써 어느 분야에서는 서독보다 더 발달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컨대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를 보면 오히려 서독에 가면 휴대전화기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동독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닙니다. 동독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기 때문에 서독이 오히려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발표 중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61년 베를린 장벽을 구축한 것이 통일에 영향을 가져 왔는데, 이 때 장벽을 구축한 저의는 사실상 동독에 있는 젊은 기술자들 특히 엘리트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동독은 노인들만 남아 있는 폐허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89년에 ‘게리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표현된 젊은 기술자들이 대기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서독으로 도주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독일 통일의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경선을 경계로 한 사대가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독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동독은 GDP가 1994년에 9% 성장을 했는데, 유럽에서는 오직 동독 지역만 이런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용길 교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 선생님은 독일



정용길

동국대 행정대학원 원장

● 통일과 관련해 남북한 통일 문제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점진적 통일을 채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일과 같이 급속한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길**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 독일 통일 5주년을 회고해 보면서 그 경험과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토론에 같이 참여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저는 이 부분을 4단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통일 과정을 살펴 보면서 당시의 독일 통일 과정이 한반도와 비교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과 또 통일 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반도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타났던 일들과 한반도의 문제 상황과는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 이제 독일이 통일된지 5년이 되었는데 통일된 후 곧바로 독일 통일의 어려움들은 3~5년 혹은 10~15년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네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 통일 5주년을 보면서 한반도에 교훈으로 삼을 것들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와 상황이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대개 독일 통일 과정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일은 통일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광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독일은 통일이라는 이름으로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분단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일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지요.

● 저는 "독일은 통일을 전연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미·영·불·소 4개국이 독일 통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스스로 통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독일은
분단되어 있어도
통일된 효과를
누리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차근차근 해
놓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해 낸 것이 뭔가 하면 '분단되어 있어도
● 통일된 효과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적·물적 교류라고
● 판단해서 그들은 인적·물적 교류에 상당히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러니
● 까 1951년 베를린협정을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 사
● 람들의 발전 과정을 보면 1951년부터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1970
● 년에 동서독 정상회담이 열리고,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 1973년에 UN에 동시 가입하는 상황이 차례대로 전개되어 가는데, 우리
● 는 그것과 정반대로 UN에 동시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 채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을 해 놓았고, 그 다음
● 에 정상회담 하라고 하고, 그리고 교역을 더 확장하자고 하는, 그러니까
● 독일에서는 기반이 탄탄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 것과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발전되어 가
● 는 연대수와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반대입니다.

● 그러니까 저는 독일은 분단되어 있어도 통일된 효과를 누리기 위한
● 여러가지 일들을 차근차근 해 놓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통일에 크게 기
● 여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독일 통일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유럽 통합이
● 라고 봅니다. 당시에 유럽은 통합 기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
● 벽이 열리기 불과 며칠 전인 1989년 10월말에 빌리 브란트가 한국에 왔
●었는데 빌리 브란트는 그 당시에 “통일은 그렇게 가까운 날 될 수 없다
●고 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막광작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 쓰시고 계신 활의 10개항 통일 방안에도 연방제가 아니라 국가연합 구
● 조로 우선 통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연합 구조라는 것은 잘 아시
● 다시피 연방제 전단계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남북연합하자는 것과 마찬
● 가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사람들이 통일되리라고 생각을 안
● 했었는데 그것을 상당히 앞당겨서 통일이 된 것입니다.

●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활이
● 통일을 하려고 했었나? 그리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독일은 급진적인
● 통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은 독일 사람들도 다 아는 내
● 용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하면 그런 기회가 계속 상존하고 있다가 자기

“한가지 분명한 것은
독일은 급진적인
통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은 독일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하면
그런 기회가 계속
상존하고 있다가
자기네들한테 통일할
기회가 오느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라도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그 기회를
포착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들한테 통일할 기회가 오느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
에 갑자기라도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그 기회를 포착한 것
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통일을 하면 통일 비용
이 많이 들고 통일 후유증도 생길 것을 모르고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
이 독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통일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동독 경제상황
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 진단한 부분들이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당시의 독일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독일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착한 것이라
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제가 아는 사람들이 군대,
경찰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급 정년이 있어서 대령
으로 몇년 있다가 장군이 못 되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대령으로 최대한 끝까지 있다가
장군이 되고 또 준장이 되어서도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최대한 끝까지
있다가 소장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꼭 진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통일 문제도 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이
통일을 못 했으면 지금까지도 통일을 못했을 것은 아주 명약관화합니다.
왜 그러냐? 우선 4대 강국의 책임과 권한 아래 있던 독일 통일이었기 때
문에 그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대통령으로 혼자 독일 통일
에 대해서 사인을 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어 버
리고 독립국가연합이 되어서 그 독립국가에 각각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많은데 독일이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
은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해야 된다,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회
가 왔을 때 통일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봄
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동독이 흡수통일되는 현상을 보면서 ‘아! 통일은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해야
된다.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흡수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는 통일은 안된다’, ‘흡수통일은 안된다’, ‘돈으로 녹여내려는 통일은 안된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들로 우리 남한으로 흡수되는 통일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쪽에는 독일 통일 이후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훨씬 더 ‘통일로 인한 비용, 후유증이 엄청나다’, 저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어서 오히려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광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독일 통일은 서독 사람들이 동독에 상당히 많은 것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거나 드레스덴이나 라이프치히 같은 곳을 보면 지금 건설 경기가 상당합니다. 그것이 그냥 써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보면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은 우선 국내적으로는 서독이 기회 포착을 아주 잘 했고 당시의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기운이 동·서독을 통일시키는 데 아주 크게 기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일 사람들 스스로 ‘독일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유럽의 심장이다. 그래서 독일의 분단은 유럽의 분단이고 독일 통일은 유럽 통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독일 통일은 유럽 통합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만 이렇게 유럽 통합 기운이 한창이었을 때 독일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유럽 통합은 불가능하거나 부의미하다는 것이 상당히 강조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일 통일에 아주 크게 작용한 것으로 1990년 3월 18일에 있었던 동독의 자유 총선거 결과를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동독 자유 총선거는 아직 통일되기 전입니다. 그 선거에 의해서 정말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이 첨착지는 매우 중요한 때였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독에서 있었던 자유 총선거 결과가 브레지네르라고 하는 기독교민주당 당수가 동독에서 집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분단되어 있는 나라 양쪽 모

“3·18 동독 자유총선 당시에 왜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에 그렇게 상당히 많은 표를 던졌느냐 하는 것은 서독이 민주복지국가이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동독 사람들의 판단에 서독 체제같이만 되면 구태여 공산주의 할 필요 없다. 자기네들보다 훨씬 질 높은 사회보장제도에 자유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두에서 기독교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고 드 메지에르가 서독 기민당의 선거자금을 받고 선거전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서독의 기독교민주당 정치인들이 동독에 가서 선거 유세까지 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선거 포스터들이 동독에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기독교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니까 통일 정책은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독일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였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바꿔놓고 이야기하자면 북한에서 민자당이 집권하게 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남한에도 민자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민자당이 집권하게 되면 통일 문제 접근이 얼마나 쉽습니까? 더군다나 그 민자당이 북한 사람들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한의 돈을 가지고 했고, 남한 정치인들이 북한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해 주었다고 할 때, 얼마나 통일에 접근하기가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1990년 3월 18일에 있었던 동독 자유 총선거 결과 기독교민주당이 집권하게 된 것은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광작 교수님도 복지국가 건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3·18 동독 자유총선 당시에 왜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에 그렇게 상당히 많은 표를 던졌느냐 하는 것은 서독이 민주복지국가이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동독 사람들의 판단에 서독 체제같이만 되면 구태여 공산주의 할 필요 없다, 자기네들보다 훨씬 질 높은 사회보장제도에 자유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통일 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즉, 화폐 및 경제 통합을 할 때 1:1로 교환해 준 문제, 통일 비용의 문제, 실업자 문제, 신탁관리청의 문제, 비밀경찰인 슈타지 문제, 의식 차이의 문제, 재산권 반환 소송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남북한간에서도 물론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통일되면 전범자들 문제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관리청 문제와 연관지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신탁관리청에서 사유화하는 작업을 했을 때 사유화한 기업들의 88%

“신탁관리청에서 사유화하는 작업을 했을 때 사유화한 기업들의 88% 정도가 서독 사람들에게 넘어갔고, 10% 정도가 외국 사람들에게 넘어갔고, 2% 정도만이 동독 사람들에게 넘어갔다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 정도가 서독 사람들에게 넘어갔고, 10% 정도가 외국 사람들에게 넘어갔고, 2% 정도만이 동독 사람들에게 넘어갔다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 북한의 공장, 기업들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남한 사람들이 88%를 갖게 되고 또 외국이 10%, 물론 유럽이라는 데서의 외국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외국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2% 정도를 불하 받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그 다음에 의식의 차이 문제입니다. 독일 통일 직후인 1991년 통계에 구 동독 노동자는 1인당 한달 평균임금이 한화로 약 82만 3,500원인데 비하여 서독의 노동자는 약 184만 8,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의 약 5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60%, 70% 이렇게 올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동독 사람들은 한시간 같이 일을 했는데 왜 서독 사람들은 우리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돈을 받고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받느냐 하는 것이 불만인데 비해서, 오히려 서독 사람들은 생산성에 비해서는 동독 사람들이 50% 받는 것도 너무 많이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동독 사람들은 과거의 서독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니 생활의 차이, 이런 것을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헝가리라든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과거의 동유럽 사람들보다는 훨씬 경제 수준이 나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교를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한데 동독 사람들이 자기의 옛날 이웃 국가들과 비교를 하지 않고 서독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그러면서도 지금 핸드폰 같은 것을 갖고 있다든가 새로운 시설에 의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 5년후가 된 독일 통일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독일의 학자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서병철 교수님께서 독일 통일 3주년이 되었을 때 주한 독일 대사를 모셔다가 한독사 회과학회 모임을 하셨을 때 독일 대사가 하신 말씀이 아주 기억에 남습

“남한을 서독처럼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해서 언젠가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기회가 왔을 때 북쪽
사람들도 ‘야, 저
체제로라면 통일해도
좋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니다. 한국 기자들이 와서 자꾸 독일 통일의 문제점, 즉 통일 비용 많이 들고 후유증이 많은 것만 지적하는데 오히려 그 분은 왜 긍정적인 면은 간과하고 자꾸 문제점만 찾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중요한 수술은 후유증이 있을 때 감수하겠다는 서명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 당연히 한가족이면 비용이 들고 후유증이 있더라도 수술을 시키는 것이 지 비용 걱정 때문에 수술을 안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북한 문제도 기회가 포착되면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치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통일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통일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 통일이 그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더 나 빠지지 않고 잘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독일이 통일은 정말 잘 했고 우리도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지금 한반도는 통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로 보아서 그렇게 통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독일 사람들이 취했던 것과 같이 우선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더는 문제,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좀 해결하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을 서독처럼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해서 언젠가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기회가 왔을 때 북쪽 사람들도 ‘야, 저 체제로라면 통일해도 좋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이 민간 기업인들이 북한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이 이야기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허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것이 불꼬를 트는 일들이거든요. 정부에서 그것을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 때 프랑스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서독이 동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동방정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생각이 남

니다. 바로 그것이 동유럽과 화해 협력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독과 동독이 서로 공존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정부가 우려하는 것보다 손해가 날 일은 안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부 쪽에서 파악만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통일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인적·물적 교류를 비롯해서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막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 추진해서 그것이 통일의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통일에 집착해서 지금 안되는 통일을 모든 사람들이 정치 구호로 내걸 것이 아니라 착실하게 남한 체제를 민주복지국가로 건설을 해서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체제로 통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정용길 교수님이 박광작 교수님의 발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완하는 의미에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독일이 통일을 준비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독일의 모든 정책이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취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예컨대 서독 초대 수상 아데나워의 친미, 서방 일변도 정책도 당시의 일부 비판세력은 이것은 독일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비난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독일이 유럽에서 유일하고 강력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이고 국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미국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샬플랜에 의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독일이 전후 부흥과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결국은 경제 성장이 독일의 통일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통일과 관계없는 것같이 보였던 정책들이 결국은 통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 교수께서 언급하신 동방정책(Ospolitik)에 관해서 최근까지도 이것이 독일 통일에 도움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데 의견이 팽팽하게



허 선

재정경제원 과장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역시 동방정책을 통해서 소련으로부터 불가침선언을 받아냈고 또 폴란드, 헝가리와 수교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 통일에 대한 동의를 하는 등 독일 통일의 바탕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통일 방안을 정당과 정치인 및 사회단체들이 정치 이슈 삼아 백가쟁명식으로 내세우고,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침으로써 현혹시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통일은 원대한 국가 운명을 결정 짓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선불리 다루지 않고 하나의 큰 목표로 설정해서, 이를 향해서 묵묵히 매진한 독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선 과장께서 독일에 가서 연구도 하시고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실부와 이론을 겸비하고 계십니다. 특히 경제 정책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허 선 경제적 측면은 박광작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큰 흐름과 필요한 데이터들은 제시가 되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시 정리할 부분은 정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이 5년이 지나고 이제는 평가할만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통일을 앞두고 독일 통일에 대하여 정리할 이슈들이 과연 무엇인가 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동안 생각했던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다양한 정보와 견해가 노출되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로 통일 방법의 선택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새삼스럽게 다시 짚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일 논의의 대부분이 통일 방법이 선택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의 공과를 평가할 때도 통일 방법이 선택가능한 것을 전제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정 교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지만 통일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역동성(political dynamics)에 의한 것이고 소위 '기회의 창'이라는 천년만에 또는 몇 백년만에 한번씩 율까말까 하는 귀한 기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평균수명이 200년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후유증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통일의 비용보다도 편익을 더 많이 획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서 300년이거든요. 한 왕의 평균수명은 짧게 해서는 2, 3년도 되고 길게 보면 20년~30년, 권불십년이란 말도 있지만 한 나라 한 왕조의 평균수명은 역사적으로 볼 때 200년, 300년 되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200년, 300년 가야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조 500년, 고려 500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정체되었다고 비판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통일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을 잡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치적인 과정이지 경제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평가하면서 예를 들자면 통일 이후에 급속히 악화되었던 동·서독간의 경제 문제를 평가하면서 통일 방법에 있어서 환율의 문제, 임금의 문제 이런 얘기를 들먹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되었다, 또 이후에 우리가 재산권의 보상권 문제에서 원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그런 원칙을 채택했기 때문에 투자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방법은 선택이 거의 불가능하고 어떤 식의 통일이든, 아까 ‘죽어 되는 밥이 되든’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 표현이 리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다면 잡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동·서독간의 통일도 잘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한 것을 평가하고 또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후유증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통일의 비용보다도 편익을 더 많이 획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군데 칼도 쓰고 그랬습니다마는 독일 통일은 잘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독일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느냐? 저는 아까 우리 교수님들 두분 다 통일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느 것을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것이냐 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동독이 최근에 경제가 9%, 15% 성장을 하고 실업도 비교적 많이 회복되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그런 평가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동독이 통일 이후에 1년 내지 2년만에 구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지고 있었던 산업 생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9% 성장하고 15% 성장해 보았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잘한 것 같지요. 우리가 그 정도 할 자신이 없으니 까 그 정도 했다면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피해가 크고 시간이 오래 간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면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이 잘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독일에서 3년정도 살아 보니까 독일에서는 운동 문제투성이고 잘못됐다고 실망하고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잘된 것이지만 보다 더 좋은 후유증의 관리방법 또는 산업구조 조정 내지 산업 정책 또는 경제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은 선택하기 위한 그런 점에서 고민은 생산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동서독의 경제가 지금은 상당부분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크게 망가졌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것이 불가피했느냐 아니면 막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독이 최근에 경제가 9%, 15% 성장을 하고 실업도 비교적 많이 회복되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그런 평가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동독이 통일 이후에 1년 내지 2년만에 구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지고 있었던 산업 생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9% 성장하고 15% 성장해 보았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경제」 9월호에 Hans-Werner Sinn 교수도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성장률이 당연히 높아야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슈퍼패터의 창조적 파괴이론으로 볼때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돈이 들어 갔는데 그 정도까지 성장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망가진 것이고 기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겠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통일 이후에 동서독 경제가 일시적이거나 어려움이 있었고 독일이 통일 이후에 너나 나나 비슷하게 산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20년~30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통일이 잘못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통일 이후에 경제 부문의 관리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통일 이후에
동서독 경제가
일시적이거나
어려움이 있었고
독일이 통일 이후에
너나 나나 비슷하게
산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20년~30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통일이 잘못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통일 이후에 경제
부문의 관리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을 우리 나라에 연결해서 다시 정의를 하면 통일 독일의 문제는 급진적인 통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관리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나 언론들의 평가를 보면 ‘우리는 독일 통일을 보니까 큰일 났어, 안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통일 전략의 선택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통일 전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관리 문제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독일 통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만이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리 문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일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을 때 사회주의체제로 통일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못살지만 똑같이 살자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이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이 되었던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이고 그 일자리가 국민복지와 관련된 분배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중심적인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바로 정치적인 문제이고 일자리가 바로 사회적 문제이고 이것이 바로 경제의 핵심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의 패턴이나 정책의 전략적인 타겟을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시하면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 능률성에 가장 큰 정책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결국 동독 지역에 산업의 생산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대시키고, 그럼으로써 동시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결국 통일 과정에서의 환율, 임금 인상 또 재산권 이 세 가지 문제가 사실은 투자와 직결되는 변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

“사회주의 경제나
정치체제에 의해서
균등 배분 쪽에 관심을
두고 직접적인 복지,
생활 수준, 또는
남한과의 비교 이런
쪽에 먼저 두게 된다면
서독이 취했던
관리상의 애로 문제를
우리가 답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복지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부분에서 보면 생산성에 비해서 환율이 400% 인플레이션 되었고 또 생산성은 30%밖에 안되는데 임금은 지금 현재 80%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기업들이 볼 때는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이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동독 지역의 사람을 쓰겠습니까? 기계나 이자율은 어디나 똑같으니까 쓰지만 사람은 별로 안 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 임금 문제, 환율 문제, 재산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이냐? 생각의 기본점을 일자리 확보, 투자마인드의 회복 쪽에 둔다면 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임금 수준의 문제를 처음에 베이스를 어떻게 스타트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환율 문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해결난다는 얘기지요. 만일 그렇지 않고 사회주의 경제나 정치체제에 의해서 균등 배분 쪽에 관심을 두고 직접적인 복지, 생활 수준, 또는 남한과의 비교 이런 쪽에 먼저 두게 된다면 서독이 취했던 관리상의 애로 문제를 우리가 답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점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통일 비용의 조달 문제인데 이것은 재정 운용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물론 일자리나 물가 부분에도 연결이 되지만 어쨌든간에 통일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 이것은 비용을 원가화할 것이냐 비용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1991년도 「신동아」에 통일 비용은 손비가 아니고 투자다, 그런 제목으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돈이 정부 지출이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경제의 생산력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면 그것은 소비이고 비용이 되며 생산력 증가에 기여하면 그것은 원가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원가라는 것은 투자의 원가니까 나중에 제품으로서 회수가 되어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일자리를 다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동독에다 쏟아 넣었지만 60% 이상이 소비 성향으로 쓰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단순한 육체의 재생산에 불과한 쪽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의 의욕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동독에다 쏟아 넣었지만 60% 이상이 소비 성향으로 쓰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단순한 육체의 재생산에 불과한 쪽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의 조달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투자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잘 정책 디자인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그런 쪽에 가장 많이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쪽에는 적게 쓰는 아주 섬세한 정책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독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 특히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독일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보험제지요. 어려움이 생기면 대부분 국가에서 또는 사회에서 보험처리해 주는데 우리는 장남보험제거든요. 기본적으로 노인들도 장남들이 부양해야 하고 집안의 어려운 식구가 있으면 먹여 살려야 하고, 또 집안에 결혼, 초상 등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조해야 하고, 그것이 다 보험이거든요. 우리는 개인 보험제라고요. 장남보험제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 지출 비용의 압박은 좀 작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 그래서 통일 비용의 조달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일 비용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투자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잘 정책 디자인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지로 공장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제도를 혁신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 또 하나는 통일 이후에, 예를 들자면 산업이 거의 무너져 있는 동독 지역에 산업을 어떤 모양의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랜드 비전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아까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독에 가면 최첨단 공장도 많이 있고 또 핸드폰 애기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핸드폰은 그 쪽에 전화 놓는데 6개월, 1년씩 걸리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놓을 수 없으니까 보다 싸지만 놓기 쉬운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어쨌든 간에 통신시설도 서독보다는 최첨단 시설이에요. 최첨단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파괴가 먼저 된 곳에 새로운 신규 시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어떤 산업을 들여갈 것이냐 그래서 동독 지역 쪽에 산업 투자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면 어떤 것을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광범위한 지역간의 분업

“몇 % 증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들이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생산성이 확립되느냐입니다.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가 되고 거기에서 저축이 되고 저축을 원천으로 해서 다시 투자 재원을 만들어서 다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확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부분이 안정의 기본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거든요. 우리가 서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그 구조, 그 모양대로 갖다 놓는 것이냐, 아니면 서독이 부족한 것을 갖다 놓을 것이냐, 하는 것하고 특히 또 동구권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져 가지고 새로 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지역간의 분업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독의 산업의 입지, 유치 이런 쪽에는 또 다른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그러면 과연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동독 경제가 안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자면 두 자리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 증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들이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생산성이 확립되느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동독 사람들이 자기가 번 것의 두 배를 쓴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반은 서독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억지 성공이지요. 서독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성공입니다.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가 되고 거기에서 저축이 되고 저축을 원천으로 해서 다시 투자 재원을 만들어서 다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확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부분이 안정의 기본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격차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 지역간의 격차가 국가 평균에 비해서 아주 좋은 나라가 80%가 되고 아주 나쁜 나라가 50% 되니까 한 60%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우리나라도 잘 사는 동네하고 못사는 동네하고 차이가 최저 60 정도 되고 잘 사는 데는 1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용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우를 조금 들여다 보면 결국은 통합 비용의 적정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해볼 만한 프로젝트라고 하고 그러면 가장 싸게 하는 것이 경제 하는 사람들의 이슈인데, 결국 이것은 급진적인 통일이 되든 어떻게 간에 기회가 있지만 하면 해야 한다는 명제에서는 똑같지만 만일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는 한 짐진

“통일 비용은 생산성의 격차가 심하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생산성 격차가 적으면 통일 비용이 적게 드는, 생산성 격차의 함수라는 것은 명쾌한 얘기인데 북한 쪽의 생산성이 우리의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60% 정도 올려 주는 것이 우리의 통일 비용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당장 정부나 또는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은 통일 비용은 생산성의 격차가 심하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생산성 격차가 적으면 통일 비용이 적게 드는, 생산성 격차의 함수라는 것은 명쾌한 얘기인데 북한 쪽의 생산성이 우리의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60% 정도 올려 주는 것이 우리의 통일 비용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생산성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기술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차피 북한은 필요하니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 기업들이 안 들어가고 우리 돈이 투자가 안 되고 그러면 독일 돈, 미국 돈, 일본 돈들이 투자가 되면 나중에 통일 이후에 북한의 시장이 전부 다 그 사람들 것이 되고 통일의 이익이라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제품으로 공장으로 일자리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외국에 통일 편익이 다 넘어가고 통일 비용은 우리가 부는 그런 넉센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는 투자 쪽은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들이 나진·선봉 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많이 보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통일 전략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통일원에서 나온 통일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고 상대가 있는 게임이에요. 상대가 어떤 입장과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게임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 어떤 입장에 처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통일 방안을 밀고 나가겠다 하는 것은 상대가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임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론을 주장합니다. 북한이 어떤 변화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합당한 전략들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예를 들자면 현재 체제 고수의 시나리오냐, 또는 중국식의 전환 모델의 성공이

나 또는 동독식의 모델이나 또는 루마니아식의 폭발이나 이런 네 가지 큰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상황이 유동적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 그때마다 준비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준비 자세는 저는 그것을 ‘냉장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네 가지 시나리오 또는 그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정책 대안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가만 놔두면 썩어 버리니까 냉장고속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지면 시나리오에 따라 만들어서 냉장고 속에 넣어 놓은 우리의 정책 수단들을 꺼내 손질해서 그때 쓰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통일 방안을 하나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의 수단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만의 하나 그런 시나리오와 형식의 통일이 안되고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통일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통일의 준비는 전부 다 헛고생이 되고 헛비용이 된다,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통일 부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유연성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정적인 측면의 고찰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허 선 객관적인 측면의 고찰이지요.

사회 통일 이후의 동독 지역 관리에는 실패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은 사실 심각한 것입니다. 동독 시절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 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하루종일 큰 일은 하지 않더라도 어디엔가 나가서 한 몫 한다는 것과 통일 후 민영화된 직장으로부터 실적이 없다고 해고 당하여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통일의 후유증입니다만 장기적인 면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며, 오히려 개인 혹은 사회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흥미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고찰,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찬
한국은행 조사역

마지막으로 김영찬 조사역께서 말씀해 주실 순서입니다. 김 조사역께서도 역시 독일에서 연구하고 공부하셨기 때문에 특히 금융문제를 주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찬 앞에서 거의 다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제가 언급할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슈가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통화 통합, 통독과 함께 현격한 격차가 있는 상이한 경제 체계가 합쳐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주된 내용들은 1:1의 급속한 통화 통합에 따른 산업 생산의 급감, 실업 급증, 반환을 우선한 재산권 문제, 신탁관리청의 부동산 재산 매각 방식, 통일 관련 자금 수요 예측의 부적절과 통독으로의 막대한 이전 지출 및 재정 적자의 팽창 등을 들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992년 가을에 독일에 가서 금년 3월에 귀국했습니다. 독일 경기가 한창 악화되고 있을 때 들어 갔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을 보고 돌아온 셈입니다. 독일에 도착했던 시점이 통독, 동구권 붕괴, 유고 내전으로 동독 주민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집 값이나 중고차 값이 한창 올라 있을 때였고 1993년부터는 각종 세금이 오르고 신설되면서 물가도 오를 데다가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공이 철폐되는 등 통일의 후유증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팽배했지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1992년 후반부터 1993년까지 독일에서 외국인에 대한 테러도 빈발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집에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동독의 항구 도시 로스톡 같은 곳에서는 난민촌에 대규모의 방화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제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도 한국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극우파를 표방한 단체로부터 “더 친한 공격을 할테니 그리 알라”는 통보가 와서 가족들을 대피시키고 남학생들이 경비를 지던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공격이 있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들 해주신 대로 1994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많이 호전되면서 통독후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통독후 두번째 총선을 앞두고

“앞에서 언급들 해주신 대로 1994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많이 호전되면서 통독후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 그 해 여름까지만 해도 콜 총리의 재선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각종 세금 인상이나 실업 문제 등으로 콜 총리의 집권 연정이 수세에 몰리고 있었고 여론 조사 결과로는 사민당(SPD)의 샤프링(Scharping) 후보가 거의 10%를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경제연구소나 정부 기관 연방은행으로부터 경제 현황이나 전망에 대해 청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이 과연 독일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공에 의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당시 세계경제 회복의 덕을 본 것이었느냐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어쨌든 경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콜 총리의 재집권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동독 지역에서는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PDS)이 20% 정도 득표를 하기도 했고, 집권 연정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당시 총선은 콜 정부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환율을 한 나라의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치라고 볼 때 통독 초기 연방은행의 고금리 정책으로 DM이 강세를 보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 후에도 DM이 강세 통화로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독일 경제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은행의 평가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방은행은 통화 통합시 동독 주민들의 초기 소득 보장, 동독 기업의 경쟁력, 인플레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1의 전환 비율을 제안했었는데 그 제안과 달리 다분히 정치적으로 동독화가 1:1로 전환된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연방은행 총재였던 뢰(Pöhl) 같은 경우는 총재직을 그만 둔 후에도 몇 차례나 생산성 격차를 무시한 1:1 통화 통합으로 동독 경제가 이치림 무너졌다고 ‘파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국제언론인협회(IPI) 서울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연방은행의 가둠(Gaddum) 부총재가 “통화 통합은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듯이 연방은행의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연방은행의 책임인 물가 안정은 다른 실물 경

“사실 아직도 동독의 GDP는 독일 전체 GDP의 10% 미만이고 더구나 지금까지의 성장이 서독 지역으로부터의 막대한 이전 지출에 의해 가능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자체적인 추진력으로 성장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분야에 비하면 별 문제없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과 — 작년 동서독의 생계비 상승률은 각각 3.7%, 2.7%로 양독 지역의 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을 보였고 그전에 동독 지역 물가가 두 자리 상승을 보인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물가 상승이라기 보다는 집세, 공공 요금의 현실화된 데 따른 구조 조정적인 변이 강했다고 하겠습니다 — 통화·경제·사회 통합 당시 서독측의 협상 담당자가 현 연방은행 총재인 티트마이어(Tietmeyer)였다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지요.

어쨌든 작년 10월의 총선, 11월의 장벽 개방 5주년, 작년 말의 신탁관 리칭 해산, 금년 10월의 동독 5주년 등 중간 평가를 내릴 시점에서의 전반적인 평가는 ‘괜찮았다’고 해도 부난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동독의 산업 생산, 실업, 재정 적자의 확대, 막대한 이전 지출 등 아직도 문제는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박 교수님이나 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독 경제의 부흥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유럽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동독의 GDP 성장률입니다. 작년에 9%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거의 같은 성장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동독의 GDP나 산업 생산은 통화·경제·사회 통합과 함께 급격히 감소했었기 때문에 빨라야 금년 말에나 198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율 자체에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아직도 동독의 GDP는 독일 전체 GDP의 10% 미만이고 더구나 지금까지의 성장이 서독 지역으로부터의 막대한 이전 지출에 의해 가능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자체적인 추진력으로 성장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실업 문제입니다. 1994년초 피크에 달했던 실업률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해도 통일전 900만 명에 가까웠던 취업자 중 1/3이 줄어들었으니 그 정도가 어떠한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실업자가 양산된 측면과 사회주의 시절 과다 고용 상태에서의 잉여 고용이 경쟁 체제에 노출되면서 정리된 측면도 있다고 해야겠지요. 사실 독일 정부는 실업을 줄이는 데 많은 돈과 노력을

“일자리는 나라가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살았던 동독
주민들에게 실업은
매우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 후에 북한 산업이
감퇴될 경우 실업
보험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기울였지만 공식적인 실업에 잡히지 않는 단축 노동이나 직업 전환을 위한 재교육, 조기 은퇴 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일자리는 나라가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살았던 동독 주민들에게 실업은 매우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 후에 북한 산업이 감퇴될 경우 실업 보험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신탁관리청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았던 바로는 통일 후에 신탁관리청만큼 이곳 저곳에서 두들겨 맞고 언론에 오르내렸던 조직도 없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서독측으로부터는 돈을 너무 험하게 써서 세금을 낭비했다, 동독 주민들로부터는 동독의 재산을 너무 험값에 넘긴 심하게 말하면 식민지 전위 기구라는 비판을 받았지요. 하여간 1994년말 해산시까지 말도 많았는데 이것은 처음에 신탁관리청에 건 기대가 컸었던 데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 당시만 해도 구동독 재산의 매각으로 6,000억 DM 정도의 이익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독 정치가들은 그 자금으로 통일 비용이 상당 정도 충족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동독의 거의 전 생산 수단이 일시에 시장에 나왔던 데다가 소유권 문제, 기업들의 구채부 부담, 임금 상승에 따른 경쟁력 상실에다 신탁관리청이 매각 기준으로 삼은 매입자에 의한 투자와 고용 보장 요구도 맞물려서 결국 1994년말 해산된 신탁관리청과 그 후속 기관은 260억 DM의 손실을 남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연방정부의 부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룰 총리나 신탁관리청장이었던 브로이엘(Breuel) 여사는 ‘신속한 매각’ 방침이 최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운영을 맡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그 정상화 과정과 부실 기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정상화에 우선한 신속한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도 몇 가지 제시되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발간

“하지만 콜 총리나
신탁관리청장이었던
브로이엘(Breuel)
여사는 ‘신속한 매각’
방침이 최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운영을 맡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그
정상화 과정과 부실
기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통일경제」 9월호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던 진(Sinn) 교수의 ‘지분 매각 방식’인데, 물론 그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방안이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만난 독일 교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통일후 북한의 국유 재산의 사유화에서 독일이 택했던 것과는 다른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유화 기관의 복수화나 유부상 배분의 조합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른바 ‘통일 비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교수님께서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준 부정적인 교훈이 바로 이 비용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낭만적으로 통일을 생각하던 우리들에게 통일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현실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독일의 경제 구조적 특성이 우리와 다른 상태에서 통일 비용을 강조함으로써 통일에 대해 너무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독일 통일을 앞두고 서독 정부는 통일에 따른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통일로 인해 서독 주민들이 포기해야 할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며 동독 주민들을 단기간 내에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었습니다. 통독후 첫 총선에서 야당측이나 일부 경제학자들이 통일에 따른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는 했지만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한 한 글에서는 당시에는 통일이라는 분위기의 탓이었는지 그 비용에 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공감대’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정부가 통일에 따른 소요 자금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보다는 낙관적으로 본 측면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한 언급들이 독일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따른 부담에 대비할 태세를 갖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독과 관련돼 자금 조달은 처음에 조세가 아닌 채부에 중점이 두어졌지만 소요 재원이 처음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1993년부터 부가세 등 세금이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독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경우를 보고 미리 연구해야 할 것은 통일에 따른 소요 금액의 추정 외에도 그

“우리가 독일의 경우를 보고 미리 연구해야 할 것은 통일에 따른 소요 금액의 추정 외에도 그 조달 방법 (세금 인상, 채무, 지출 축소 또는 항목 변경, 국유 재산 매각 수익의 극대화 등)과 공정한 부담의 문제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달 방법 (세금 인상, 채무, 지출 축소 또는 항목 변경, 국유 재산 매각 수익의 극대화 등)과 공정한 부담의 문제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을 자주 강조하다 보면 통일이 부담으로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통통후 서독 지역에서 동독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돈의 규모, 즉 독일 정부가 순(純) 공공(公共) 이전 지출이라고 표현하는 연간 약 1,500억 DM이라는 금액은 동독 GDP의 50%, 서독 지역 GNP의 5% 정도로 서독 지역의 경제 성장분을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서독 지역의 GDP 2조 8,000억 DM을 생각한다면 금년까지 예상되는 7,000억 DM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금액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현재의 양독 지역 경제 성장률이 지속된다고 할 때 2000년까지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앞으로도 1조 DM 정도가 동독에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독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의 지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약 3/4이 투자 목적이 아닌 소비적 목적 즉, 사회보장비나 행정 비용 등으로 쓰여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도 겹쳐 금년 초에 「스피겔」(Spiegel)지에서 동독에 지원된 돈들의 약 10%가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통일로 북한 지역을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그 돈이 제대로, 향후 양측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초기 충격 완화를 위한 얼마간의 사회보장적 지출은 불가피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언급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이전 지출을 비용쪽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통일이 가져올 이익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일반적인 서독 주민들이 통일로 인해 가지게 될 것으로 얻은 것은 사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말 금년 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동독 주민들은 통일로 뭔가 나아졌다고 느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지만 서독 주민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다, 통일은 그저 언론이 상기해주는 것이다 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우리는 이와는 사정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독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의 지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약 3/4이 투자 목적이 아닌 소비적 목적 즉, 사회보장비나 행정 비용 등으로 쓰여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몇천 년을 같이 살아온 한 민족이 합쳐진다는 동질성 회복 외에도 현실적인 측면으로 북쪽이 막혀 섬이라고도 볼 수 있는 현실에서 탈피해 자동차를 몰고 대륙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純) 이전 지출이라고 할 때 총(總) 이전 지출과 차이나는 부분이 우리나라로 한다면 북한 지역으로부터의 세금 수입 등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북한 경제가 얼마나 빨리 활성화되는가에 따라 이전 지출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국방비의 감축 가능성이라든가 서독의 경우에서처럼 통일로 인한 추가 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등도 감안이 되어야겠지요. 여하튼 단순히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당 기간 생활 수준이 정체될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해야겠지요.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중앙은행으로서 제일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통화 통합의 과정이나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초기 요인이 될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사실은 통일 비용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황폐되었던 동독 지역의 인프라 스톱러처를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박광작 교수님, 마지막으로 결론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작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모두 다 우리의 통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염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실업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실업 문제에 관해서는 몇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김영찬 선생님께서 아까 언급된 실업이 많다 하는 것을 저는 잘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독의 실업을 말씀할 때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동독은 EU내에 하나의 지역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되지 않으면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U내에서 실업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스페인의 실업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동독은 서독의
보호하에 무슨 온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
14.3%로 예측되는
동독 지역의 실업률이
통일 관리 정책의
실패에다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24%나 됩니다. 벨기에는 14.7%, 프랑스는 12.5%, 이탈리아는 11.5%에 달하는 고실업이 EU의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이들 국가는 EU내에서 국제 경쟁력, 지역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품을 보이코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이유에서의 실업률도 이들 국가는 거의 동독에 맞먹습니다. 마치 동독은 서독의 보호하에 무슨 온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 14.3%로 예측되는 동독 지역의 실업률이 통일 관리 정책의 실패에다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독의 실업을 통일의 문제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독일 통일만 생각하지 EU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동독의 주민이 약 1,550만명 정도 되니까 약 760만 정도 전후가 노동활동 인구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통계를 보면 놀랄일입니다. 동독 지역에 있어서 모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62%가 여성입니다. 여성 취업자가 많다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여자가 상당한 고령이 되어도 다 취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베를린에서 지하철을 타고 동베를린 지역에 가면 옛날 우리가 30년전에 하던 지하철 받차승무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에 현대 산업사회에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자동화가 다 되어 버렸거든요.

여기 「한텔스브라트」 1990년 3월 6일자에 제일 중요한 것이 투자보다도 인간교육, 직업교육이다 그랬거든요. 동독의 직업교육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것이 아니었고, 가장 문제되는 계층이 여성 근로자와 장년 이상의 근로자인데 어떻게 해서 안 배우겠다 하는 사람을 현대의 고도화된 산업 조식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폐된 실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공부문에서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실업을 더 줄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통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요즘은 인간자본도 기계와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를 조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컴퓨터 산업사회에 넣어 버리는 것과 같이 주관에만 익숙한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구동독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비효율체제일 뿐만 아니라 은폐된 실업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했다고 해서 은폐된 실업체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일 후에도 불가피하게 시장경제체제에서도 공공부문 같은 곳에서 일부 잠정적으로 흡수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구동독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비효율체제일 뿐만 아니라 은폐된 실업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했다고 해서 은폐된 실업체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일 후에도 불가피하게 시장경제체제에서도 공공부문 같은 곳에서 일부 잠정적으로 흡수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점은 우리가 북한 주민에 대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이는 지급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도 북한 주민을 위한 시장경제 교육 실습장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 평화봉사단을 만든다든가 직업교육팀을 보낸다든가 해서 직업교육을 먼저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본이 들어가더라도 결국 운영할 수 있는 경영진과 고급기술자는 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자기들은 주관밖에 못 뵈기니까요.

동독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도 40년, 50년간 노력 동원, 정치 동원밖에 안 배웠다 말이지요. 현대 산업사회의 구성인이란, 물론 정치도 중요하지만, 산업사회의 경제요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안 갖춘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의 실업률을 유지했다는 사실 자체도 저는 독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논의해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맺는 인사말씀으로서 통일 문제의 우수한 월간 잡지인 「통일경제」에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발표하고 토론한 이 내용이 게재되어 현대 그룹의 대북한 경제 협력, 투자 등 통일과 관련한 경제 활동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입장에서 기업들의 통일 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면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박광작 교수님, 토론에 임해 주신 정용길 교수님, 허선 과장님, 김영찬 조사역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에 참여해 주시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